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45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 의 자 : 한기호 · 김승수 · 김성원  
강선영 · 김선교 · 유용원  
신성범 · 권성동 · 김정재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 나.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
- 마.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 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 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1조).
- 사.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안 제13조).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역이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1년 이상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를 마치고 전역(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 이행이 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이행자의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제6조에 따른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병역이행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병역이행자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다.

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병역이행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병역이행자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병역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병역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제9조(전역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병역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전역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취업준비 지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만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채용 시의 우대 등)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가능 횟수 및 기간 동안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공개채용 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 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1. 제2호 외의 병역이행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이행자로서 5년 이하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5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20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30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병역이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